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2004. 9

김 국 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 영 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요 약>

- 본 보고서는 공화당 정강정책에 제시된 외교안보정책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실태 및 민주당 측 대안에 비추어 분석하고,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1. 공화당의 외교안보정책 기초

- 공화당 정강정책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온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번창하도록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선언함.
 - 미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미국식 국제주의 추구
- 테러와의 전쟁 승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되,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공세적 현실주의와 일방주의적인 외교노선의 지속을 시사함.
- 아울러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미군 군사변환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등을 가속화할 것임을 명시함.

2. 주요 외교안보정책 추진 방향

- 테러리스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리즘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분쇄하여 자유를 번성케 함.
- 대량살상무기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차단시키며, 위협 대두 단계에서부터 정면 대응함.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력히 추진함.
- 테러조직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제 공격함.
-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지만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리더십 원칙을 대체할 수 없음.
-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2004년부터 MD체제를 작동시킴.
- 미군의 경량화·신속화·침단화를 목표로 한 군사변환을 가속화시키고, 해외주둔 미군을 미래전쟁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재배치함.

3. 아·태전략 및 한반도정책

- 호주·일본·한국·태국·필리핀 등과의 안보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아·태지역에 민주화와 자유무역을 확대함.
-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음.
-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요구함.

4. 공화·민주 양당의 외교안보정책 비교

-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재확립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민주당은 테러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리즘을 양산하는 근본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민주당은 공화당의 선제공격론을 비판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 동결 및 안전관리를 위한 ‘초동단계 예방행동’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

극 주도할 것을 강조함.

-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고전적인 정규전 능력 배양에 집착하여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함.
- 민주당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급한 감축은 미국과 지역 안보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케리 민주당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12,000명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함.
-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케리 후보는 6자회담과 병행하여 북·미협상을 추진하여 북핵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5. 정책적 고려사항

- 2005년 1월 새로 출범하는 미 행정부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것임.

- 공화당 행정부가 재출범하면 우리 정부는 이상주의적인 시각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익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며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 미국은 미군을 경량화된 신속대응군 체제로 개편하며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군은 주한미군 활동범위 확대 및 감축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함.
-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바,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 정책조율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외교적 노력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보다 강압적인 반확산정책의 실효성을 중시해 온 부시 대통령은 제2기 집권기간 중에도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치·경제적 압박을 증대하며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함.

목 차

I. 문제제기	1
II. 부시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2
1. 공화당의 외교안보정책 기초	2
2. 주요 외교안보정책 추진 방향	3
3. 아·태전략 및 한반도정책	7
III. 공화·민주 양당의 외교안보정책 비교	10
1. 외교안보정책 기초	10
2.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11
3. 동아시아전략과 한반도정책	13
IV. 정책적 고려사항	17

<표>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비교

I. 문제제기

- 2001년 1월 제43대 대통령에 취임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등 강력한 전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였음.
- 이라크를 침공(2003.3.19)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직후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급상승하였으나, 이라크 내부의 폭력사태가 지속되면서 그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에 관한 비판이 증대됨.
 - 대량살상무기 정보 왜곡, 포로학대 논란, 미군 희생 증가 등
- 공화당은 뉴욕에서 2004년 8월 30일~9월 2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부시와 체니(Dick Cheney)를 대통령 선거(2004.11.2)에 출마할 정·부통령 후보로 재선출하고, 자유(freedom)를 핵심기치로 한 「더 안전한 세계와 더 희망찬 미국」(A Safer World and a More Hopeful America)이란 제목의 정강정책¹⁾을 발표하였음.
- 본 보고서는 공화당 정강정책에 제시된 외교안보정책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실태 및 민주당 측 대안에 비추어 분석하고,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1) 2004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A Safer World and a More Hopeful America"(2004 Republican Party Platform), August 2004.
www.gopconvention.com.

II. 부시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1. 공화당의 외교안보정책 기초

- 공화당 정강정책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온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번창하도록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선언함.
 - 미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미국식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 추구

- 테러와의 전쟁 승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되,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공세적 현실주의와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의 지속을 시사함.
 - 적들의 호전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제 공격
 - 반테러 국제협력을 추구하지만 어떠한 국제기구도 미국의 리더십(leadership) 원칙을 대체할 수 없음.

- 아울러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제 구축, 미군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등을 가속화할 것임을 명시함.

2. 주요 외교안보정책 추진 방향

가. 테러와의 전쟁 승리 전략

- 테러리스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리즘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분쇄하여 자유를 번성케 함.
 - 기습공격을 통한 테러 네트워크 붕괴, 국제협력을 통한 테러자금 차단 등
-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는 테러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범죄적임으로 모든 국가는 테러를 지원할 것인가, 테러를 격퇴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함.
 - 80여 개 국가 및 유엔 등 국제기구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
-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의 연계보다 더 큰 위험은 없는데, 테러조직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preemptively) 행동을 취함.
 - 2002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불량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조직에게 비밀리에 제공할 경우 억지나 봉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함.²⁾
- 민주주의 국가들은 테러리즘을 지원하지 않는바, 독재정권 교체 및 민주주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가 및 세계의 영구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함.

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ww.whitehouse.gov/nsc/nss.html.

- 테러 지원국이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민주정부 수립
- 전세계적으로, 특히 중동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촉진

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전략

-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이 준수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차단시키며, 위협 대두 단계에서부터 정면 대응함.
 - 파키스탄 핵과학자 칸(A. Q. Khan)의 북한·리비아·이란 등에 대한 핵프로그램과 장비 밀매망 폐쇄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강력히 추진하여 선박·항공기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들의 불법거래를 차단함.
 - 현재 PSI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스페인·호주·폴란드·일본·캐나다·싱가포르·노르웨이·러시아 등 15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정권은 커다란 위협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든지, 리비아(Libya)와 같이 국제사회에 복귀하여 도움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이라크 공격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민주적인 이라크 정부가 안정될 때까지 미군을 주둔시킬 예정임.
 -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441」을 통해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

- 대량살상무기 보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세인 정권은 이를 개발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다. 군사력 첨단화 및 해외미군 재배치

- 군의 사기 진작과 군사력 첨단화를 위해 국방예산 및 연구개발(R&D)비를 대폭 증액함.
-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2004년부터 MD체제를 작동시킴.
 - 2004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Fort Greely)기지에 초보적인 MD체제 배치
 - 2006~2008년 지대공미사일(PAC-3), 레이저 항공요격기, 이지스 대공 요격함 및 전역 고고도 미사일 방위망을 갖춘 MD체제 작전 배치³⁾
- 미군의 경량화·신속화·첨단화를 목표로 한 각 군의 군사변환을 가속화 시킴.
 - 육군의 미래전투체제(Future Combat System), 해군의 유도 미사일 잠수함, 공군의 무인항공기 개발 등
- 미군은 군사변환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바, 냉전시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배치된 해외주둔 미군을 미래전쟁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재배치함.

3) "U. 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Excerpts]," January 8, 2002. 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여 년 내에 유럽·아시아 주둔 미군 6~7만 명이 본토로 귀환할 것이라고 밝힘(2004.8.16).⁴⁾

라. 반테러 국제연대와 미국의 지도력

- 테러와의 전쟁 승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결속을 강화함.
 -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 야심을 포기하도록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함.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구권지역 확대 및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영역 확대를 지지함.
 - 9.11 테러 직후 미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하는 제5조 집단자위권(self-defense) 조항 발동
-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지만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리더십 원칙을 대체하거나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미군은 유엔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음.
 -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권 불인정

4) George W. Bush, "Remarks at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Convention," August 16, 2004. www.cfr.org/campaign2004/pub7250/george_bush/remark.

3. 아·태전략 및 한반도정책

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

- 호주·일본·한국·태국·필리핀 등과의 안보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아·태 지역에 민주화와 자유무역을 확대함.
 - 호주·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은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이라크 민주화, 북한 핵문제 해결 등에 기여
- 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대만·뉴질랜드와 같은 우방과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보강함.
 - 인도와 공통의 안보 이익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킴.

나. 동북아국가들과의 관계

<일본>

- 일본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이며, 미·일 동맹은 아시아의 평화,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중요한 토대임.
- 일본은 미국과 공통의 이익, 가치 및 긴밀한 국방·외교 협력에 기초하여, 아·태지역과 세계적 현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함.
 -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제안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미·일 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 올림.⁵⁾

<중국>

- 중국과의 관계는 아·태지역의 안정, 평화 및 번영 증진 전략에 중요한 부분이며, 강력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중국의 등장을 환영하지만 중국의 민주발전이 미·중관계 발전의 핵심요소임.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양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한반도 안정 증진 등 상호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 중국의 비확산 공약 준수, 미국의 대만 자위 공약 등에서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만, 중국이나 대만이 현상유지(status quo)를 변화시키기 위해 취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결정에도 반대함.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대만의 자위를 지원함.

<러시아>

- 미국은 러시아가 전략적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현실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오고 있음.
 - 러시아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 개정에 합의
 - 핵·미사일 감축 등 안보 현안에 협력하고 있음.

- 러시아는 미국과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민주화가 불균등하게 진전되고 있는 데

5) Richard L.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11, 2000. www.ndu.edu/inss/press/Spelrepts/SR_JAPAN.HTM

대해 우려하고 있음.

- 구소련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독립과 안정을 계속 지원

다. 한반도정책

<한국>

- 한국은 소중한 민주적 동맹국(valued democratic ally)이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호함.
-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음.
 -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미국 측은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병력 12,500명의 감축계획을 제시⁶⁾

<북한>

- 북한은 국제체제 밖에 존재하는 불량국가임.
- 한국·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요구함.
- 미국인들은 과거에 북한의 침략(aggression)을 격퇴하기 위해 피를 흘렸고, 지금도 침략을 막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

6) 국방부 뉴스, 「제11차 FOTA 회의결과와 의의」, 2004. 08. 29.
mnd.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2004-09-06

Ⅲ. 공화·민주 양당의 외교안보정책 비교

- 민주당은 보스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2004.7.26~29)하여 케리(John Kerry)와 에드워즈(John Edwards)를 정·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국내에서 강하고 해외에서 존경받는 미국’이란 제목의 정강정책을 발표하였음.⁷⁾

1. 외교안보정책 기조

-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주장하며, 테러와의 전쟁 승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정책 목표는 유사하나, 이를 추구하는 방식과 수단 선택 그리고 이라크전쟁과 한반도정책에 관한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부시 후보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미국식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를 추구
 - 케리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미국의 지도력을 손상시켰다고 보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조

7)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The Democratic Platform for America), August 2004. www.dems2004.org; 박영호·김국신,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1]-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4. 8.)

2.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가. 테러리즘 격퇴 전략

-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비타협을 강조하고, 테러조직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저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공세적 전략을 취함.
 - 민주당은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를 선제공격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했다고 비판
-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테러리즘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테러리스트 박멸(manhunt)에 초점을 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케리 후보는 테러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리즘을 양산하는 근본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민주문화가 정착되도록 민간외교(public diplomacy) 전개
 - 인권단체·자유언론·노동조합의 풀뿌리 민주화운동 지원 등

<이라크 전쟁>

- 부시 행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인명과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음.
 - 테러조직 알 카에다(al Qaeda)와 후세인 정권 사이의 연계 및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증거 과장

- 케리 후보는 이라크 사태를 방지할 경우 중동 전체에 종교적·인종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정치적·군사적 협력을 확보하여 이라크를 안정시키고 재건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임.

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 부시 후보는 대량살상무기 거래 실태 조사 및 차단, 위협 대두 단계에 서부터 정면 대응, PSI의 강력 추진, 리비아 식 해법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케리 후보는 부시 행정부가 비확산(non-proliferation) 관련 국제협약들을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에 몰두함으로써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비판함.
- 케리 후보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들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초동단계 예방행동’(early preventive action)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주도할 것을 강조함.
 -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협약 강화, 미·러간 핵무기 감축협상 가속화 등

다. 국방정책

- 부시 행정부는 국방예산 및 연구개발비 증액, MD 체제 구축, 미군의 경량화·신속화·첨단화를 목표로 한 군사변환 가속화,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여 년 내에 유럽·아시아 주둔 미군 6~7만 명의 본토 귀환을 제안
- 케리 후보는 미군의 군사변환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고전적인 정규전 능력 배양에 집착하여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al threats)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함.
 - 대테러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수부대(Special Forces), 대민작 전요원, 민정경찰 등을 증가시킬 것을 제시
 -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역군인 4만 명을 추가 증원
- 케리 후보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급한 감축은 미국과 지역 안보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미군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을 주장함.⁸⁾

3. 동아시아전략과 한반도정책

가.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 부시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 여부를 타국과의 관계 설정의 핵심 준거로 삼음.

8) John Kerry, "Remarks at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Convention," August 18, 2004. www.cfr.org/campaign2004/print.php?id=7257&type=pub.

-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재확립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⁹⁾
 - 군사력은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사용

나. 동아시아전략

- 공화당과 민주당의 동아시아전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공화당은 일본의 안보역할을 더욱 중시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 추구를 비난하는 등 견제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민주당은 일본의 중요성을 공화당 같이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 않은 반면,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는 협력 증진을 더욱 강조함.
 -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며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
 - 중국이 국제무역,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개입정책 추구
 - 러시아의 핵무기 및 핵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민주주의 발전 지지

9) Samuel R. Berger, "Foreign Policy for a Democratic President," *Foreign Affairs*, Vol 83, No. 3, May/June 2004, pp. 47-63.

다. 한반도문제

<한·미관계 및 주한미군>

- 공화당 정강정책은 한국을 민주적 동맹(democratic ally)으로 규정하였으며,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로 확대할 것을 시사하였음.
 - 부시 대통령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지 않음.
- 민주당 정강정책은 역사적인 동맹(historic ally)인 한국과 관계 개선 및 한·미 경제·안보 협력 증진을 강조함.
-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12,000명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함.¹⁰⁾
 - 공화당은 한·미 연합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

<북핵문제 해결 방안>

- 케리 후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욕구를 오히려 촉진시켰다고 비난함.
 - 핵폭탄 6~9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 추가 생산
- 민주당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합의는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핵문제의 해결 원칙에 관해서는 양당의 견해가 일치함.

10) John Kerry, "Remarks at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Convention," August 18, 2004. www.cfr.org/campaign2004/print.php?id=7257&type=pub.

○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케리 후보는 6자회담과 병행하여 북·미협상을 추진하여 북핵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¹¹⁾

- 남북한 군축,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한 통일 문제 등

<표>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비교

항목	공 화 당	민 주 당
외교 안보 정책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번창을 위한 미국의 지도력 - 테러 척결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최우선 순위 - 국익 우선의 미국식 국제주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의 지도력 - 테러 격퇴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최우선 순위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적·도덕적 권위 재확립
반테러 전쟁 및 대량 살상 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 - PSI 강력 추진 - 독재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 - 이라크 공격 정당성 주장, 미국 주도로 이라크 안정화 - 미국의 리더십 원칙 및 일방주의 외교노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및 민간외교를 통한 테러리즘의 근원적 해결 - 초동단계 예방행동 강화 -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실패작,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화 - 동맹국과 협력증진 및 국제협약 준수
미군 군사력 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력 첨단화 및 MD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 - 미군 군사변환 가속화 -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추진, 향후 10년간 6-7만 명 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변환 등 군사력 첨단화 - 대테러전 특수부대 증강 - 미군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현역군인 증원 -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신중, 조기 감축 부적절
한반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민주적 동맹 - 주한미군 병력 감축, 대북 전쟁 억지력 유지 - 완전한 북핵 폐기, 철저한 검증 - 6자회담틀 고수 - 북한은 국제체제 밖에 존재, 북핵 위기 고조시 무력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역사적 동맹국 -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북한 오판 우려 - 완전한 북핵 폐기, 철저한 검증 - 6자회담과 북·미협상 병행 - 남북한 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 등 광범위한 의제 협상

11) John Kerry, "New Strategies to Meet New Threats," June 1, 2004. www.cfr.org/campaign2004/print.php?id=7077&type=pub.

IV. 정책적 고려사항

- 2005년 1월 새로 출범하는 미 행정부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것임.
 -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힘의 우위에 기초한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임.

- 군사력을 이용한 정권교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안보전략은 정당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화당 행정부가 재출범하면 우리 정부는 이상주의적인 시각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익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며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 이라크 재건 지원 및 파병 문제에 관해 일관성 유지
 - 미국의 세계전략을 배려한 한·미동맹의 전략 비전 제시 등

- 한국의 국제적 위상,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강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한·미 동맹의 군사·경제적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미 안보협력을 통한 국방비 절감 및 경제 발전 효과
 -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강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 주도
 - 한국의 독자적 안보역량 신장을 위해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활용
 -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패권 부상 등 동북아지역의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배경으로 한 대주변국 외교 자율성 확보 등

- 미국은 미군을 경량화된 신속대응군 체제로 개편하며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군은 주한미군 활동범위 확대 및 감축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함.
 -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정자로서의 미군 역할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용 분담 고려
 -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증강 사업 지속 등

-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바,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 정책조율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북한 핵개발에 대한 위협인식 및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차이 조정,
 - 대북 경제지원 방식 등 현안문제들에 대한 이견 조율,
 -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인식 불식 등

- 외교적 노력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보다 강압적인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의 실효성을 증시해 온 부시 대통령은 제2기 집권기간 중에도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치·경제적 압박을 증대하며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인권문제 및 PSI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 추진
 - 북한 정권교체에 협력하도록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
 - 최악의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

- 향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함.